

부마항쟁 30주년, 그 날을 다시 기억한다

글 · 차성환 csh0429csh@naver.com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독재의 폭압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남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학생과 시민의 항쟁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벌어진 5일 동안의 항쟁은 계엄령과 탱크로 일단 진압되었지만 그 파장은 넓고도 깊었다. 부마항쟁은 10·26정변, 유신체제 붕괴의 뇌관이었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부마항쟁이 발생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부마항쟁이 한국 현대사에서 지니는 의미와 그 정신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부마항쟁의 의미와 정신

부마항쟁의 의미를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민중 저항의 사례와 같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부패한 권력은 피지자의 저항에 직면하여 몰락한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민중의 힘이라는 상식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시점에서 부마항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이 공개적 독재



체제인 유신체제로 전환하여 국민을 지배하던 시대였다.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보장하는 체제였고 박정희는 취약한 체제의 정당성을 경제성장에서 찾았는데 그것이 중화학공업이었다. 1960년대 이래 경제 개발을 통해 한국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빈민층과 노동자 계급을 형성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 확대는 계급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권은 군부와 관료, 독점자본가(재벌)의 지배 연합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배제함으로써 정치는 사라지고 통치만 남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신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독재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대다수 한국민은 정부 계획에 따라 총화 단결하여 경제 성장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부 불순 세력만이 인권과 민주화를 요구한다고 선전하였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인들은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 아래 경제 성장을 위해 인권 탄압과 독재정치를 기꺼이 수용하는 국민으로 비쳐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마항쟁은 다수 민중의 목소리로 지배 권력의 억압에 대한 거부와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했던 것이다.

첫째, ‘선 성장 후 분배’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거부되어 온 공정한 분배에 대한 요구다. 성장 과실에 대한 분배 요구는 197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불황과 맞물린 경제 위기를 계기로 민중 생활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가시화되었다. 윤소영 교수(한신대)에 의하면 1970년대 말이 되면 외채에 의존한 수출 지향 산업화가 한계에 봉착하여 기존의 개발주의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1979년 4월에 실시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라는 남한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에 따른 긴축정책은 민중 생활을 위기에 빠뜨렸고 따라서 부마항쟁은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최초의 저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국민적 요구다. 박 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결국 경제개발을 통한 국민총생산의 증대라는 목표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요약할 수 있는 민중의 물질적 생활 향상의 욕구를 개발 계획에 접목시킴으로써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물신주의적 풍조를 만연시켰다. 그러나, 물신주의에 젖어 있는 듯 했던 민중은 경제동물이기를 거부하고 주권자의 권리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부마항쟁이 한국 현대사 속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먼저 박정희 군부독재 18년 동안 쌓아온 근대화 신화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부정이다. 부마항쟁은 박 정권을 직접 타도하지 못했고 10·26정변이라는 매개항을 통해 유신체제를 붕괴시켰지만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민중의 이름으로 정면에서 부정함으로써 체제 위기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유신체제는 설사 10·26정변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마항쟁 이후에는 더 이상 그대

로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부마항쟁의 중요한 의미는 항쟁 주체로서 민중의 등장이다. 민중은 1970년대 저항적 지식인들이 재발견한 개념이다. 1960년대 이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사회 변동과 계급 분화의 과정을 밟았고 사회적 모순은 심화되어 갔다. 민중은 사회적 모순의 직접적 담당자로서 그리고 변혁의 주체로서 설정되었으며 1970년대는 이러한 민중이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전태일은 그 최초의 표상이다. 그러나 1970년대 민중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민중의 모습은 부마항쟁에서 나타난 민중이다. 부마항쟁에서 민중은 대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단순한 동조자가 아니라 주동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집합이었지만 자신들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집단적 토론을 통해 정확한 정치적 판단을 내렸으며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의 민중은 다시 5·18항쟁과 1980년대 민중운동 그리고 6월항쟁에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되풀이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부마항쟁은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민중사건’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부마항쟁은 당대의 민주화운동을 고무시키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투쟁했지만 정권의 폭압과 민중의 침묵에 고통스러워 했다. 민중과 함께 하는 민주화운동은 민주세력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었으나 쉽지 않았다. 그런데 부마항쟁에서 민중들은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민중의 힘을 확인하고 감격했다.

부마항쟁의 여파는 깊고 컸다. 단기적으로 보면 부마항쟁은 다른 지역의 잇따른 쫓겨나고 고무하였다. 부마항쟁이 일어난 후 각지에서 시위가 이어졌고 심지어 수 십 년 동안 시위가 한 번도 없었던 경남 통영 같은 소도시에서도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부마항쟁은 10·26사건을 촉발했고 ‘서울의 봄’ 시기 수많은 외침들을 고무하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5·18항쟁과 6월항쟁에 이르는 1980년대 운동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부마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을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부마항쟁 정신 같은 것은 없었고 자유에 대한 무의식적 본능 같은 것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변혁적 의식으로 충만한 민중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항쟁의 정신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선언문이나 구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 그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정치사상적으로는

부산교대 앞에서의 시위



동아대에 진주한 계엄군

자유민주주의와 분배 정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 민중이 항쟁에 참여한 동기는 불의한 권력 횡포와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다. 이러한 공분 즉 정의감에 기초한 저항정신과 이를 바탕으로 저항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체적 참여정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지지와 지원이라는 연대 정신이 세 가지를 부마항쟁의 정신으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마항쟁의 교훈

그러면 부마항쟁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첫째, 국정을 담당하는 집권세력이 과도한 힘을 집중하고 그 힘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반드시 민중의 저항을 불러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권세력은 항상 민의를 살피고 권력은 한시적으로 위임된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라는 거의 완벽한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위치는 부동의 것이었으며, 언론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여론을 조작할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정보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반대세력과 국민을 감시, 위협하고 고문과 조작을 일삼았다. 1979년에는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제거하기 위해 직무정지가처분을 내리고 다수의 힘으로 국회의원직 제명을 강행했다. 그 결과는 민중의 저항이었다. 집권세력이 국민을 장기판의 줄로 여기고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둘째, 현대 민주주의에서 제 4부라고 일컬어지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운천장을 통과하는 시위대

다. 박 정권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언론의 진실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 결과 유신시대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고 이른바 유언비어가 무성했다.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언론기관은 시위대의 돌팔매를 받았고 취재 차량은 뒤집어졌다.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지 않는 언론에 대한 민중의 질타는 무서웠다. 언론을 자기의 시녀로 전락시킨 권력은 그 부메랑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부마항쟁은 보여주고 있다.

셋째, 민주주의와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항상 민중과 함께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민중과 함께 하지 못하는 운동은 생명력이 약하다. 1970년대에는 지식인, 학

생들이 민중과 함께 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났지만 아직 실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부마항쟁 초기에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도 민중이 그토록 적극적으로 호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부산대학교 학생운동 지도부는 오히려 조직의 보전을 위해 시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운동가들도 민중들의 대규모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 만약 운동가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했다더라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생과 운동가들은 앞서 나가는 민중들을 뒤따라가는 형편이었다.

1980년대 들어와 우리 운동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민중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어갔다. 30년이 지난 오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지난해 촛불시위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부마항쟁의 민중과 오늘날의 민중은 다르다.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 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남은 과제들

그러면 이러한 교훈을 현실 타개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과거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이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것이든 아니든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야말로 다른 나라의 이론이나 경험보다 훨씬 더 우리 현실에 적실성 있는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부 집단의 고의적 역사 왜곡에 맞서 그 기만성을 폭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폄하하고 낡은 권위주의와 국가폭력을 옹호하면서 독재의 망령을 불러내는 담론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부마항쟁과 10·26정변으로 파탄한 박정희 독재를 근거 없이 미화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였으나 지금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작업이 시급하다.

셋째,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구체적 대안과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근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대안은 추상적 사고에서 나오기보다 민중의 삶이 요구하는 작은 실천들에서 시작되고 그런 경험의 바탕에서 고민한 것들이 검증되고 토론을 통해 알맹이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마항쟁은 성공한 항쟁인가?

부마항쟁은 유신독재 붕괴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으나 박정희의 비극적 죽음과 신군부의 쿠데타로 '미완의 항쟁'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 점에서 짧게 보면 부마항쟁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크게 성공한 항쟁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부마항쟁이 뿌린 씨앗은 5·18항쟁, 6월항쟁을 거쳐 꽃 피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오기 때문이다. 다만 부마항쟁은 역사적 조명을 제대로 받을 기회를 놓침으로써 전국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항쟁이라는 인식을 확립하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민**